

코로나 악화에 넘쳐나는 의료폐기물 ‘골머리’

보건소·의료기관 등 배출량 급증에 광주·전남 소각시설 포화 상태 소각업체 초과 보관 요청...일부 생활폐기물 전환 처리로 감염 우려도

장흥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A 업체는 지난 23일 의료폐기물을 법적 허용량보다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청)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요청한 것만 벌써 네 번째다. 코로나 이전에는 전무했다는 게 영산강청 설명이다.

A 업체는 광주와 전남을 포함, 전국각지에서 수거되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료폐기물이 급증해 법적으로 허가 받은 의료폐기물 보관공간이 가득 찰 때 문이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 그날 소각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일 소각해야 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이 넘쳐나는 바람에 걸뭇하면 소각은커녕, 법이 정한 보관 용량을 넘기는 실정이다. 5일 간 보관이 가능한 일반의료폐기물조차도 임시 보관 공간까지 마려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A 업체가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규모는 58.8 t. 이날 들어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다. 최대 130%까지 가동할 수 있지만, 자칫 소각시설

과부하로 기계 고장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넘쳐나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7만명을 넘어서면서 덩달아 늘어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로 관련업체가 초비상 상태다.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는 내근 직원까지 수거 업무에 투입해도 폭증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광주·전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도 처리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안까지 내놓았지만 근본적 대책이 아닌 데다, 생활폐기물 대란 및 감염 우려도 제기되면서 감독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4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월 5.295 t 수준이던 동구 지역 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12월 38.391 t 으로 7.2배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41 t 을 넘어선 상태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 등의

료기관,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양이 증가했다는 게 동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구보건소도 지난해 10월 913kg에 불과했던 의료폐기물이 11월 1587kg로 1.72배 늘어났고 올 들어서는 2월에만 1861kg으로 급증했다.

보건소 뿐 아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도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 담당자는 “지난해 한달 평균 30 t 수준이던 의료 폐기물이 최근 들어 40 t 정도까지 늘었다”며 “대형병원은 지속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등의 확산세도 한몫 하면서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의 경우 일반 의료행위 때보다 2배 가까운 의료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게 의료업계 설명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확진, 격리된 환자들이 많다 보니 폐기물 양도 비례해서 늘었다”며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실은 물론 수술실을 다녀가면 소독 등을 위해 배출되는 폐기물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에게도 비상

이 걸렸다. 의료폐기물을 수거해 소각업체까지 나르는 수거업체는 광주와 전남지역 16곳으로, 엄청나게 급증한 의료폐기물로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B 수거업체 관계자는 “사무직 직원까지 수거업무에 동원될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9일 의료폐기물의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 격리의료폐기물이었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에서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양성으로 판정된 PCR 폐기물과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키트 등을 격리의료폐기물에서 일반의료폐기물로 배출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인 반면, 평소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던 것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만큼 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 일반폐기물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생활쓰레기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계자는 “일반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소독조치를 하고 배출되며, 장기간 보관 후 배출돼 감염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위헌으로 재심서 형량 감소 국가가 초과 처벌 보상해야 헌법재판소 판단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져 열린 재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 전에 내려진 초과 처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 등을 담은 위헌제정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헌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조항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 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이라며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형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심판의 발단은 상습절도로 가중처벌을 받고 징역 2년을 복역한 A 씨 사건이다.

헌재는 2015년 A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1항(상습절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미 만기 출소를 한 A 씨는 재심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은 효력을 상실한 특가법상 상습절도 대신 형법상 단순 상습절도로 공소장 죄명을 바꿨다. 재판부는 바뀐 공소장의 죄명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6개월을 초과 구금당한 셈이 되자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6개월분의 형사 보상을 청구했으나,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9년 형사보상법 적용 대상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아 헌법의 인권보장 외 조항이나 평등권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여천NCC 참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야”

민주노총, 노조 참여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 규명 작업에 노동조합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예방 대책을 만들려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50년 된 국가산업단지의 30년 넘은 열 교환기가 준비된 현장에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며 “화약과 같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매일같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여수국가산업단 내 여천NCC 3

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

올해 들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77명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16명은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85% 이상이 법 시행 전에 사고가 났거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범망을 빠져나갔다”며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끝내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방역택시’ 운영합니다 ‘코로나 방역택시’ 운전기사가 24일 오전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방역복을 입은 상태로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택 치료 중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 택시(6대)를 운영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CJ 대한통운의 대화 거부 정부가 직접 중재 나서라” 전남지역 시민·노동단체 촉구

전남지역 시민·노동단체는 “CJ 대한통운의 대화 거부해 정부 직접 중재 나서라”고 24일 촉구했다.

전남진보연대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90개 단체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과 택배 노동자들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 국민과의 약속 앞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임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노조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남서 비닐하우스 화재 80대 숨져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께 해남군 옥전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하우스 안에 있던 A(84)씨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잡풀 등을 태우던 중 불이 비닐하우스로 옮겨붙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